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와 제국주의

▶ 8, 9면

서평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12면

국제
미국은 우경화했는가 / 프랑스 투쟁은 계속된다

▶ 6면

북지국가 논쟁
누구와 동맹하고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

▶ 11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2010년 11월 13일 ~ 11월 26일 | 제44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이명박 정부, 핵발전소 수출에 이어 군대도 파병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하라

11월 9일 국무회의는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특전사 1백50여 명을 파병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핵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협력 약속이 파병 약속 아니냐는 의혹을 그동안 줄곧 부인해 왔다. 그레 놓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비밀리에 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국방부장관 김태영은 비공개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페르시아 만과 인접해 있어 강대국들이 너도나도 진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역이다. 이미 10여 국가가 파병한 군인 3천여 명이 주둔 중이다.

지난해 한국과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프랑스는 이미 1995년에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을 체결했고, 양국간 군사협정 비밀조항에는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랍에미리트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르피가르> 보도를 보면, “핵무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핵발전소 수출 입찰 경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은 어느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이다.

한국이 수출한 핵발전소 원자로 APR1400 모델은 원천기술에 관한 권리 일부를 미국 방산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 기업은 이번 핵발전소 수출에도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수출 건에 대한 허가·심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미국은 최종 순간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전략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부가 자국 이익에 더 부

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중동은 몹시 불안정하다. 미국의 중동 패권 전략이 핵심 원인이다.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 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용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 수출한 정부가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

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파병은 핵발전소 수출과 한 묶음이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력 신장’이라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국회의 동의만 떨어지면 언제든 신속 파병이 가능한 신속파병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 동의 전에도 파병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대놓고 무기 장사를

하겠다면 무기 수출국 세계 7위를 목표로 공세적인 파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의결한 이번 국무회의는 소말리아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안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류 제국주의적 야욕을 펼치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한몫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하라.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현대차 비정규직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5~6년 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한 기륭전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잇따른 승리에 고무받아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에 더 강력히 맞서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영춘 위원장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점차 투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조합원을 세 배나 늘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는 11월 1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월 30일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

고 1천5백여 명이 양재동 본사에 집결해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몽구가 나서라”고 외쳤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천여 명이 사상 최대의 집단소송도 청구했다.

또, 탄압이 극심한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 지회장을 징계하려던 사측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봉쇄한 노동자들에 놀란 사측은 감봉 3개월 정도로 징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은 요지경

“강기정 의원의 발언[김윤옥 로비설]으로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조선시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 G20 때 밥도 먹지 마라?

“풍도 싸지 말고 방귀도 끼지 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냄새 나잖아.”
한 네티즌의 분노

“요즘 뜨는 건배사 중에 ‘오바마’가 있다.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뜻”
MB 특보 출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경만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드시고자 작정하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하였고 …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멘 하라, 이거 다 녹음돼서 청와대에 들어간다”
한기총 명예회장 목사 엄신형

“돈 받고 한 거예요. … 참고로 전 이명박 대통령 안 찍었습니다. 개 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김장훈이 이명박 취임식 때 노래 부른 사연

“G 그림만 그려도 경찰 가는 세상에, G 잡아 먹는 기사를 쓰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취 먹는 개구리 사진’ 기사를 본 네티즌

“우리 반 학생이 백일장 시 부문에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주제가 G20이 나왔더라고요. 학생이 ‘G20으로 어떻게 시를 쓰냐’고 묻더라고요. 참가국을 차례로 대면서 아~미국이여, 아~일본이여~ 이렇게 쓰라고 할 수도 없고 …”
한 중학교 교사의 한탄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11월 7일·11일, G20 회의 시위로 집결하라’,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풀라주 38] 내가 G20에 반대하는 107IG 이 유’, ‘금속노조 탈퇴를 획책하는 기사자 우파들’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협의를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건, 민주노동당 7건, 진보신당 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진보진영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불법으로 몰아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을 도덕적으로 흠집내려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 정치인을 심시일반으로 후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정치활동이다.

기업주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자본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건네는 것과 는 비교할 수 없이 옳은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광노현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검찰과 경찰이 이런 탄압에 나선 배경

에는 깊어가는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있다. 이명박은 최근 청와대가 직접 대표포문을 만들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것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또한 이명박의 처 김윤옥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더구나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온갖 오물로 범벅이 된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등은 덮어두고 진보정당만 공격하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위기와 부패 의혹을 덮기 위한 진보정당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재현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보여 준다.

이 일이 있은 후 63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만 해 온 위원장 현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 끝에 9년 전에 만들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인권·노동권을 짓밟았고, 그것을 가리는 포장지로 국가인권위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차별금지법안 제출 등 민주화 운동의 오랜 열망 중 일부를 사업에 반영하자, 보수우익은 국가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이들을 권력기반으로 당성한 이명박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해 무력화하려 했다.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것이 실패하자, 조직을 축소하고 위원장, 상임위원들을 물갈이 해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인권위원장은 필요없다.

이 와중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현병철은 인권 운동은 고사하고 인권 관련 논문 한 편 써 본 적도 없는 자였다.

현병철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망가지져 왔다. MBC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사건, 용산 철거민 학살, 민간인 사찰,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등이 벌어지며 인권이 짓밟히는데도 국가인권위는 침묵을 지켰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나온 올바른 결정들도 사회적 압력을 받은 몇몇 상임위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못마땅하게 여긴 현병철은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며 비민주적 운영을 계속해 왔고 상임위원회마저 무력하게 만들고자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서 억압과 차별에 분노하는 대중의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던

국가인권위가 기득권 세력의 압박 속에 고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후퇴한다면 권력자들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현병철 사퇴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 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현병철뿐 아니라 인권과 거리가 먼 자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어떤 압력을 받아도 독립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역량을 모아서 노동자·민중의 인권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엇보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의 빈소에서 만난 한 친구는 “우리도 비자를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얻고 싶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며 울먹었다. 그러나 정부는 ‘적법한 단속’이라며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보상은커녕 입에 발린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이래로 정부의 단속 정책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알려진 수로만 30명이 넘는다. 십수 명이 단속의 공포를 못 이겨 자살하고, 도망치다 심장마비나 추락해 사망했다. 심지어 출입국 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서 13명이 사망했다.

특히 올해는 ‘G20 안전 개최’를 명분으



11월 7일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아발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로 지난 5월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격해 왔다. 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 부족 때문에 정부는 목소리를 높인 만큼 많은 사람을 단속하지는 못했지만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느낀 체감지수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 공포스러웠다.

길거리 곳곳에서 외국인 검문 검색이 일어났고, 자의적 연행과 체포가 계속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퍼져 이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출입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한국 남성들이 태국 여성노동자 두 명을 ‘제포’해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라며 넘기고는 이 여성들의 집을 털어 달아난 일이 있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싸잡아 테러리

일어나지 않은 테러에 호들갑을 떠는 제국

앞으로 여행용 가방에 프린터 토너를 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뉴스는 최근 ‘테러 음모’가 발각된 후 나온 초현실적 대응들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사례다.

원래 정부와 언론들은 예멘 테러리스트 — 자기 주소와 전화 번호를 흔쾌히 공항 당국에 알려 줬다 — 가 폭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투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률 도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없던 일이 됐다.

또, 저들은 우리가 안보 활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음모’에 관한 정보가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문 경찰에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신판 ‘불량 국가’가 된 예멘은 지금 미국 정부의 위협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는 예멘에서 활동 중인 미 특수 부대 작전권을 중앙정보국(CIA)에 넘기면서 예멘에서 비밀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 한다.

CIA는 ‘엘리트 수색 사찰팀’을 운영하면서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무인 폭격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 무인 폭격기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예멘은 전쟁과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나라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한 결과다.

예멘은 최빈국 중 하나이며 파괴적 내전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간섭은 더 많은 폭력과 고통을 낳을 뿐이다.

발생하지 않은 공격을 놓고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들은 미국 정부가 매일 저지르는 학살과 파괴에는 관심이 없다.

제국주의의 침묵과 비밀주의는 종식돼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스트 취급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 봄부터 모스크와 기도방에 상시 출입해 출입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했다. 또 경찰은 남반구 국가와 이슬람 지역 출신자를 경계하는 것을 테러리스트 ‘색출 요령’으로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테러 대비를 위해 ‘테러혐의자’ 5천4백여 명을 등록·특별관리해 왔으며 G20이 다가오자 1백여 명(대부분이 무슬림 이주자들과 고함)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테러 위협을 높이는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최근 ‘국익을 위한 신개념 파병’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정부는 최근 ‘G20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필리핀 활동가 6명을 인천 공항에서 모두 강제 추방했다. 이들은 테러와는 아무 상관없는 NGO, 노조 활동가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민을 속직양 삼으며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정원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G20 합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 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IMF 재정을 두 배로 늘린 것, 셋째 한국 정부가 얘기하길 그중에서도 한국 지분이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개발도상국 지분율이 6퍼센트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IMF의 성격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졌나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기구라는 점 말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에서 IMF가 엄청난 긴축을 요구한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유럽이 갖고 있던 지분을 일부 중국으로 옮긴 것뿐인데요, 7명이 나눠 먹던 것을 20명이 나눠 먹는다고 세계 민중의 삶에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의 비토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2퍼센트 깎였죠.

이처럼 IMF의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세계 민중의 입장에서 강대국들끼리 지분을 나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렇게 근본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은 IMF의 재정을 두 배로 늘린 것은 세계 금융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IMF를 복권시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강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가는 사악한 삼총사’라고 장하준 교수가 부른 기구들을 강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하길 ‘한국 지분이 늘어난 것은 앞으로 한국이 IMF에서 돈을 더 많이 쉽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1998년에 한국 정부가 IMF에서 돈을 빌



11월 7일 노동자대회 “G20에 대한 항의는 불평등한 세계경제 질서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항의입니다”

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열빠진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환율 전쟁

IMF ‘개혁’ 다음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 환율 전쟁 재발 방지인데요,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 연방은행이 돈을 찍어서 결국은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거꾸로 세계경제 위기가 단지 몇 마디 수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무능력과 현대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잘 보여 줬다고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내세우는 것이 빈곤개발 의제인데요, 한국이 원조를 받는 위치에서 원조하는 위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업 파트너십

을 통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발표됐냐면 한국 정부 ODA[공적개발원조] 발전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의 빈곤개발 원조를 보면 대부분 무상원조이고 18퍼센트가 유상원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32.8퍼센트예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40퍼센트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제가 촛불시위 때 이런 팻말을 본 적이 있어요. “공약 지킬까 봐 무서운 건 니가 처음이다.”

지금 선진국들이 하는 원조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 하면 개발도상국이 부채 상환을 위해 2.3달러를 갚는 동안 1달러를 빌려 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관철되면 그나마 무척 적은 원조조차 유상원조로 바뀔 수도 있죠. 이게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입니다.

빈곤을 없애려면 당장 부채부터 탕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그토록 국적 상승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G20 회의 개최로 인한 브랜

드 이미지 상승이 월드컵으로 생기는 이미지 상승 효과보다 0.1퍼센트 높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산한 게 20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어도 지난번 월드컵까지는 대개 기억합니다. 지난번에는 남아공, 그 전에는 독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G20은 바로 전 회의가 어디서 열렸는지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시위 진압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경호를 강화하면서 지불한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를 수 있는 경호법을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한국 국민들이 입은 가장 큰 피해겠죠.

이번 회의에서는 WTO 도하 라운드를 다음 파리 회의에 안전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할 것입니다. WTO 쪽과 사전 회의에서 다음번에 다루는 것으로 이번에 대략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째 G20이 현재의 불평등한 세계경제 질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G20에 항의해야 합니다. G20 이후에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책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G20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G20은 한국 역사상 가장 값비싼 ‘1박 2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KBS ‘1박 2일’은 우리에게 웃음이라도 줬지만 G20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회의라는 점에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강요하는 1박 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플라주 39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취market

G20 맞이 대포폰 급처분!!!

근해 복지성형외과 | F클리닉 | 검색 | 한나라당 공동구매

국내최초검찰인증획득~
SANSUNG AnyGoal 정품!
5대 한정판매~

상품번호 : 2MB-2848-048

판매자의 다른 대포상품보기 클릭!

- 롯데월드 무대포
- 4대강용 무대포
- 음향대포 연말출시예정

뉴라이트할인구매가 747 원

- 세운점
- 제조사/왕산지
- 배송비
- A/S
- 주문수량

최신 미친마우스 핸드폰출
CRS(총리실)/Blue House

무료 [무음]
청계현

1 개

☐ Y 해외배송시 체크

일루전

▶ 1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저항과 성과가 이어지자, 사측은 울산공장의 “선봉부대” 중 하나인 시트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사측은 11월 15일자로 시트 1부 파견업체를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강요해 파견을 수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울산공장 시트 1부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손민수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불법 파견을 인정할 수는 없

습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원한다면 정몽구와 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도발은 아직 정규직의 연대가 미흡한 상황을 틈타 전후적 부위를 꺾고 12월로 예정된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시트사업부 조합원들이 해고되면 대의원·현장위원들을 집결시키고 전 조합원 잔업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측도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해 어떻게든 막아설 것이고, 우리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4공장의 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잔업거부를 다

집하며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트 투쟁에 연대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정규직] 현장조직들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전초전

울산 공장의 정규직 활동가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투쟁을 엄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점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이경훈 지부장이 ‘시트 투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중재하는 역할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한 것은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재가 아니라 연대 건설이다.

많은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정규직 연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듯이, 정규직 노조와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사측이 비정규직의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 투사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정규직 투사들은 더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런 지지가 커지면 그만큼 정규직 노조 지도부에게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을 하나의 노조로 묶는 1사1노조도 추진

돼야 한다.

한편, 금속노조는 11월 22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를하기로 했다.

또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울산에서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현실이 되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사측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는 광범하고 폭넓은 공동전선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모승훈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을 해도 되지만 초·중·고 교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준이다.

“그럼 교사·공무원은 왜 투표권을 주나? 차라리 투표권도 주지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구요.” 이번 징계로 울산에서 정직을 당한 조용식 교사의 말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다 보장돼 있어요. 이번에 핀란드도 가 보니까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시의원 활동을 겸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교사들은 교육감, 교육 위원에 출마하기만 해도 사표를 내야 해요. 지독하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실정법

일부에서는 실정법 저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번 탄압에 대응할 때 정치활동 자유 요구를 부각하지 말자고 한다. 8월 중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의 중징계 압력에 맞서 경계계를 해 넘어가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 교사는 정치활동 탄압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1989년에 출범할 때 교사는 노동자인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잖아

요. 당시에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 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거나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정치 지형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 돼야 합니다.

“이번 탄압이 전교조 탄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총까지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해 보수 정치권 전체가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동계급이 다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고 전교조를 공격해 왔다.

지난 6월 교육감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패배 위기감을 느꼈던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진보정당 후원을 공격해 우파를 결집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도 6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교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대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해직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영광의 상처로 아물어서 오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사 노동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진보정당 후원 건으로 해직 1호가 된 충청북도의 허건행 교사는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임된 교사들은 출근 투쟁을 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교사대회에는 교사 1천5백여 명이 참가해 “교사 대학살을 자행한 이주호 장관 퇴진”을 결의했다.



정선영

11월 7일 전국교사대회 이명박의 전교조 탄압은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다.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이것은 ‘공정 사회’가 아니라 ‘부정 사회’다

동시에 터져 나온 이명박 정권의 비리들이 집권당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 의원 강기정의 폭로대로 대통령 부인이 직접 돈을 받고 인사 청탁에 관여했다면, 또 민주당 의원 이석현의 폭로대로 청와대가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했다면, 가혹이나 불신 받는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과 존립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폭로를 재촉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레프트21>은 두 달 전에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의 ‘공정 사회’는 ... 정적을 향해 겨눌 사정 카드의 코드명이 될 듯하다. ... 그러나 이명박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처지가 아니다. 레임덕에 걸려 칼날을 잡고 여기저기 쏘아대는 게 이명박의 처지다. 칼날은 자기 편에게도 상처를 입힐 것이고 칼날을 쏜 이명박 자신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옥죄고

물론 이것은 이명박이 원한 그림이 아니다. 처음에 한화, 태광, 씨앤 등 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기업들을 수사하면서 박지원 등의 이름을 거론할 때만 해도 검찰 수사는 민주당을 겨냥하는 듯했다. 야당을 옥죄고, 여당의 기강을 세우고,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듯했다.



이명박과 김윤옥 요즘 여러가지 의혹과 치부가 드러나서 많이 괴로울 듯하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패의 실태에서 야당과 연결된 끈만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업주들은 언제나 여당과 야당 모두에 ‘보험’을 들어 놓기 마련이다. 특히 정권 교체 후에 기업주들이 어디로 몰렸을지는 뻔하다.

그래서 태광을 조사하다가 2009년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이 다시 불거졌고, 씨앤을 조사하다가 이상득 로비 시도 사실이 밝혀졌다. 씨앤과 이명박 사돈 기업 효성과의 연결 고리도 드러났다.

이러니 여권에서도 속죄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법했다. ‘버리는 카드’가 된 것은 이명박 친구 천신일

인 듯하다. 천신일이 꼬리라면 몸통이 얼마나 클지도 알 만하다.

이처럼 정권이 천신일까지 쳐내며 공격하는 마당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김윤옥과 대포폰’을 터뜨려 맞불을 놓은 것이다. ‘대포폰’은 청와대의 불법 사찰 범죄 은폐뿐 아니라 검찰의 공모도 드러냈다.

그러자 검찰은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한나라당 5명 포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반격에 나섰다.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후원금은 재벌들의 검은 돈에 대면죄도 아니지만, 재벌 스폰서의 비리를 봐주고 성접대나 받던 검찰에게는 부담 없는 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까지 강력 반발하고 야당들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꼬여가고 있다.

레임덕에 빠져드는 이명박, 청와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검찰, 각자 살 길을 찾아나선 한나라당 의원들, 폭로로 맞서는 민주당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은 갈수록 통제 불능으로 치달는 듯하다.

이런 상황은 정권의 위기가 그 배경이다. <조선일보> 김대중은 최근 “대한민국의 ‘보수’는 지금 ... 마치 무슨 몸살 병균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한탄했는데,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61.6퍼센트가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을 반대했다.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부자 감세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정두언)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생뚱맞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인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온다면 정권의 위기는 더 견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당장은 부패의 그물망에 같이 얽혀 있는 민주당 박지원이 “영부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자”고 거재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포로가 될수록 밑에서부터 투쟁이 벌어질 기회는 넓어질 것이다.

전지윤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최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없애겠다고 하고 있죠.

이를 보면 한미FTA가 국내의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협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고기 협상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일부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발표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아도 원래 별도로 협상하려고 했어요.

전미육우협회 같은 단체도 ‘한미FTA랑 같이 해서 지난번처럼 또 한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말고 별도로 받아내라’ 하는 식으로 주문했거든요.

이번 3차 재협상, 한마디로 누더기 협상인데 이런 데서 최고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또 다루려고 할 겁니다. 3차 재협상도 했는데 4차 재협상 못 하겠어요.

이번에 안 다룬다는 것일 뿐 지금까지 미국 측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파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 안 한다는 것은 ‘이번’ 재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이번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에서는 G20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 같은 환상을 퍼뜨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해 한미 FTA 같은 반민중적 정책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번 제타결이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1백31개 작업장 중 1백26개(96.2퍼센트) 작업장이 정부의 타임오프 공세를 무력화했다.

기흥전자·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와 현대차 사내하청,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대거 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물론, 올해의 투쟁 양상은 불균등하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투쟁이 승리를 거뒀지만, 다른 작업장에서는 투쟁이 무기력하게 끝나거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올해 이명박 정부는 잘 조직된 노동계급 부문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하지 못했다. 조직 노동계급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기초노령연금 삭감, 국민중양곡지원 축소 등)를 공격했다. 곧, 외곽을 때리며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져드는 정부의 이런 공격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불안정하긴 하지만 경기 회복도 노동자들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잘 조직된 주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따냈고, 이에 자극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과 조직화에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와 진보교육감들의 당선도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최근의 성과들이 나타난 것이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 잇따른 장기투쟁 승리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위기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공격

그러나 최근 유로존의 재정 위기,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크고,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따라서 2011년에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프랑스나 그리스처럼 강력한 노동자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먼저,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너무나 강력해서 ‘싸워도 승리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를 견어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이 오히려 정부의 취약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기흥전자,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 점을 보여 줬다.

둘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투쟁들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쟁점을 제기한다.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일정하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양보론은 지금의 위기를 낳은 자본인들을 구하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또, 때때로 전 사회적 정치 쟁점이 노동계급의 사기와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올 봄에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 했듯이 말이다.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끌어 올리려면 이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효과적으로 분쇄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 상황에선 예컨대 쌍용차처럼 특정 작업장의 투쟁이 전국적 투쟁의 초점이 되곤 한다. 이때 지배계급은 한 부문의 투쟁을 확실하게 짓밟아 본보기로 삼기 위해 모든 수단(경찰, 검찰, 법원, 보수언론 등)을 집중해 공격한다. 이때 우리 측의 대응도 당연히 전 계급적 방식, 즉 전국적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반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좌파는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계급연합(반MB 민주연합)에 맞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지배계급 일부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추구하며 투쟁의 발목을 잡는 해악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이 KEC 점거파업의 중재자로 나서서 투쟁 전선에 찬 물을 끼얹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도부와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실상 민주당을 추수했고, 결국 별 성과 없이 점거농성을 해제한 바 있다.

좌파는 개혁주의자의 지도자들의 이런 한계를 비판하면서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물론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운동에 가입하는 자세로 그래야 한다.

박성환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균형외교’론

반제국주의 관점이 실종되다

얼마 전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이를 두고 “MB에게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새세상연구소의 주간 브리핑 <통일돋보기> 50호). “현실적 실의만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국익을 고려해 미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지배집단의 전통적 논리는 ‘국익을 고려해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상황”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익을 보장” 받으려면 “한국 외교의 전략은 균형외교”여야 한

다는 것이다.

새세상연구소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한중관계에 암초가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 한미동맹 강화, 대북적대 정책, 최근의 MD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점증하는 중미 갈등 속에 한국을 휘말려 들게 할 정책들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새세상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반제국주의 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전혀 적절치 않다.

자극

첫째, 이런 논리로는 미국 제국주의의 반대조차 일관되게 하기 힘들다. ‘국익을 위해 강대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 “국익을 고려해 미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지배집단의 논리”를 일관되

게 반박할 수 없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호기롭게 내놔던 ‘동북아 균형자론’이 파산한 것도 그렇다. 아직은 미국의 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배계급 다수의 현실 논리 때문이었다. 얼마 전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몰락은 이것의 희극적 반복이었다.

둘째, 중국 역시 제국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억압 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보면, 중국 역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지 않다(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주로 미국과 그의 동맹들이지만 말이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침묵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단지 ‘조중 우호’의 증거로 반겨야 할 일인가?

셋째, ‘균형 외교 전략’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본질에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균형자론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균형외교로 강대국들에게 실익을 보장받자’는 식의 두 강대국 눈치 보기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의 전략이 돼야 하는가?

이 짧은 브리핑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새세상연구소의 다른 글들에서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대안으로 강조하는 듯하다.

이 안의 가정 중 하나는 이렇다. ‘동북아시아 신냉전이 해소되려면 중미 간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만약 그

렇게 되지 못할 경우 한국이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열강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가정은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만큼이나 너무 비현실적이다.

북핵 문제, 역내 국가 간 영토 분쟁 문제 등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불안정이 다자간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상을 만들어 내는 토대지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제국주의 체제가 바로 열강들 간의 경쟁과 다툼에 근거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세상연구소의 브리핑에서 반제국주의 저항이라는 관점은 없다.

한규한

다함께가 발행한 신간 작은책

| 구입문의 : 02-2271-2395 <http://www.alltogether.or.kr>

[3대 권력 세습]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지음
3,500원

2009년
쌍용차 파업과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박설 지음
3,800원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2,500원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이정원 지음
2,500원



11월 6일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주 토요일[11월 6일] 프랑스 도시 2백50여 곳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사르코지의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전 행동의 날보다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사르코지에 저항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9월부터 거의 모든 부문의 프랑스 노동 운동이 파업을 벌였다. 정유공장, 철도, 지방 정부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 부문은 순환 파업을 벌였다.

의회는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고 퇴직 연령은 67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사르코지에 저항하는 운동 — 국민 70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 은 연금 개악이라는 단일 이슈에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의회가 대규모 파업과 최대 3백50만 명이 참가한 여덟 차례 행동의 날 시위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킨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파리의 한 대학교 학생인 안나는 <소셜리스트 위기>에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저항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호하게 행동한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군대를 보내 정유공장 파업을

파괴했다. 지난달 파리 경찰은 한 학생의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고, 이 학생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랑드퐁트 정유공장 소속 프랑스노동총동맹(CGT) 활동가인 로랑은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 그랑드퐁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접었지만, 그것이 곧 투쟁이 끝났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단호한

“만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금 개혁에 반대해 투쟁을 벌인다면 우리는 이 법안을 백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더 확산돼야 합니다. 또,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토요일 파리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도 동일한 저항 정신을 보여 줬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은 거리 투쟁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함께, 다함께, 총파업을 벌이자.”

파리의 교사인 줄리앙은 토요일 시위가 몇 주 전 시위에 견주면 규모가 줄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백만 명이 여전히 거리로 나왔고,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금 개혁 반대 투쟁이 어떤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마르세유 항만 노동자, 정유공장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 등은 다시 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합니다. 투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골칫거리다. 일부 노조 지도자는 파업 지속에 반대 의견을 표했고 운동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자 구

실을 자처했다.

그러나 노조들 간 경쟁과 기층 노동자들의 압력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운동을 팔아먹는 것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노조 연맹들은 11월 23일 추가 행동의 날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 행동의 날과는 달리 11월 6일 행동의 날에는 전국적 파업과 대규모 시위보다는 토론회와 작업 중단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다.

활동가들은 이런 활동들에 최대한 전투성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운동의 최대 장점은 놀라운 단결력이었다.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행동을 더 날카롭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운동이 신자유주의 반대 정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 분노에 의해 전진해 온 점은 그런 노력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프랑스 북부에서 일하는 교육 노동자인 마리는 이렇게 말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조차 사르코지와 맞서 싸우려면 스스로 조직돼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계급은 자기 역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짐 올프리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번역 김용욱

그리스 지방선거에서 급진좌파가 약진하다

지난주 치른 그리스 지방선거 결과는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현된 계기였다.

사회당은 대규모 긴축정책을 폈다. 그러나 올해만 총파업 여섯 번 등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득표 수는 크게 줄었다. 사회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3백만 표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2백만 표에 그쳤다. 우익 정당인 신민주당과 파시스트 정당인 라오스당의 득표 수도 줄었다.

또, 그리스에서 투표는 의무이지만 유권자의 약 40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반대로 좌파는 선전했다. 그리스 공산당의 득표 수는 10퍼센트 이상 늘었다.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는 최근 심각한 분열을



10월 7일 긴축 반대 파업

겪었음에도 쉬리자에 속한 세 개 분파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표를 얻었다.

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는 약진했다. 안타르시아는 10만 표(이전의 네 배)를 얻어 전국에서 2퍼센트를 득표했고 지방의회 의원 20명을 배출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몇 명도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

총리 파판드레우는 사회당이 패배하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당 선거 결과가 만족스러웠는지 그는 지금 조기 총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총리의 [조기 총선] 협박 전술에도 사회당의 득표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회당 정부는 끈질긴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정부 노동자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파업을 벌일 것이고 병원 노동자들은 준병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예산을 발표하는 12월 15일에 또 한 번 총파업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튜 쿡슨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기자

번역 김용욱

미국 중간선거

미국은 우경화했는가?

언론은 공화당의 11월 2일 중간선거 승리를 티파티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랜스 셀파는 티파티의 우익적 관점과 대중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말한다. 랜스 셀파는 미국의 격월간 사회주의 잡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위원이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역사적인 경제난의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역풍인가, 아니면 ‘큰 정부’에 대한 거부의 표시인가?” 대다수 ‘전문가’들은 후자의 답을 택했다.

오바마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이런 논리를 확인해 주는 듯했다. “제 생각에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예전보다 훨씬 심하게 사람들의 삶에 간섭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잠재적으로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처지도 이해합니다.”

즉, 대다수 미국인들이 정부 개입을 싫어하고 재정적자를 깊이 우려한다는 신화를 대통령 자신이 인정한 셈이다.

인기 없는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실제로는 민주당의 경제 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훨씬 짙다. 선거 직전 몇 달 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오바마와 민주당보다

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올해 초에 통과된 민주당의 의료개혁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나온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의료개혁법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의료개혁법 지지자들의 비율에 진중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이른바 ‘보수적’ 다수파는 소수파가 되고 만다.

달리 말하면, 문제는 미국인들의 확실적인 보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마녀사냥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진중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할 정치적 의지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망가진 정치 시스템에 있다.

망가진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고 기업 후원을 받지도 않았지만 티파티의 최대 규모 행사에 맞춰거나 압도적으로 더 큰 대중 행동들도 있었다. 10월 30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익과 티파티를 조롱하는 “제정신 처리기 그리고 경각심 회복 대회”에 20만 명 이상이 모이자 주류 언론계 인사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현실에서 기성 정치권과 평범한 미국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견해차



오바마는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더 인기 없는 유일한 정치세력이 공화당과 티파티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 줬다.

그나마 공화당이 끌어 모을 수 있었던 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그들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이었지, 그러한 노선 덕분이 아니었다. 2008년 대선 투표자들에 견줘 이번 중간선거 투표자들이 훨씬 더 적고 보수적이었음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개혁법 철회나 유지/개신이나를 놓고 투표자들의 견해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투표자들은 또한 52퍼센트 대 39퍼센트의 비율로 대다수가 조지 부시의 부자 감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다수 미국인들보다 훨씬 보수적인 표본 집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선거 직전 수개월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가 워낙 컸던 탓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던 몇몇 주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다.

이렇듯 선거라는 것은 여론을 가늠하는 한 가지 척도일 수는 있지만 아주 조야한 척도다. 흔히 여론조사

가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인들의 대략 60퍼센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두 전쟁 모두에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 2년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은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실업 상태로 남겨 둘 것이다. 주택 압류는 계속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처한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민자와 무슬림들을 속죄양 삼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양당 체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긴축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 결과에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긴축과 마녀사냥에 맞서 행동하고 조직할 때다.

번역 천경록

*지면 제약으로 축약 번역본을 게재한다. 기사 전문은 www.jef21.com을 보시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 되기

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11월 10일)은 점심집회를 했는데,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나왔을 정도로 참가율이 높았습니다.

저는 4공장에서 일합니다. 4공장에 한 비정규직 활동가를 예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 동지가 대법원 판결 이후 공장에서 초동주체모임을 꾸리려고 많이 돌아다녔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9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을 수시로 했고, 10월부터 수요일마다 본관향의 집회를 함께하면서 마치 옛날부터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처음 제가 비정규직 모임에 갔을 때 비정규직 동지들은 제가 정규직인 줄 알고는 놀라고 반가워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옆에서 피켓만 같이 들고 있어 쥐도 힘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4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 직접 나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1공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회사가 승용1공장에 여유 인력이 3백36명 있다고 했을 때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해야 한다며 투쟁했습니다. 정규직노조 의장부 대의원회에서 라인을 세워서라



11월 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원하청 노동자 현장투쟁단'의 출근투쟁

도 막겠다며 투쟁을 주도했고,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연대집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려면 사측은 오히려 일 자리를 늘렸습니

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잘 되는 곳에서는 비정규직 우선 해고도 막아냈는데 4공장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4공장 정규직 대의원들과 좌파 현장조직들은 4공장 원하청 연대회의를 만들어지면 그때 결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연대회의가 꾸러지면 좋겠지만, 그전이라도 먼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11월 9일)는 비정규직 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시급한 투쟁 사안

도 논의했습니다. 지금 시트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시트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마당에 재계약서를 쓰는 것은 불법파견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며 계약서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 투쟁이 시작된다면 현대차 노사간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런데 현대차노조 이경훈 지부장이 '시트사업부에서 투쟁이 벌어지면 협상중재 구실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이경훈 지도부는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투쟁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규직 조합원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의 경험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자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석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11월 3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류언론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친노동·개혁 정치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한미 FTA 추진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송영길이다.

이석행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 한미FTA 체결과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급속노조는 파업을 했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정치파업'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급속노조 위원장과 다수 간부들이 옥고를 치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때 이전 위원장도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급속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싸웠다.

송영길은 지금도 노동자들에게서 노동권을 박탈하고 사장들에게 이윤창출을 위한 무한 권력을 보장하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칭송하며 육성하고 있다.



2007년 민주노총의 한미FTA 반대 투쟁 3년 전의 적에게 봉사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선택한 이석행 전 위원장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며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 반대는 진보의 분명한 기준 중 하나다. 그래서 이석행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활동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6개월 실행을 선고 받아 큰 고역을 치렀다. 나 말고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천여 명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돼 이전 두 정권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갔다.

이것은 아직 이명박도 깨지 못한 수치다. 이런 사실을 이석행 동지는 벌써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의 행보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현장의 투사들에게 배신으로 보일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송영길의 품에서 어슬픈 중재를 자처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것이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보여야 할 진정한 자세다.

김우용 기아차 노동자

지난 호 기사를 읽고

〈레프트21〉 43호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싸울 수 있을까?’ 기사가 나와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프랑스 노조 조직율이 우리보다 낮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처럼 할 수 있을까’ 하

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답을 준 것 같다.

나는 프랑스는 1995년에 알랭 쥐페를 끌어내린 승리 경험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승리 경험이 주된 차이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후퇴와

불필요한 타협이 있었고 그런 주관적 요인이 핵심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이 좋았다.

또, 우리가 이런 약점을 뛰어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도 좋았다.

이재환

수능에 즈음해

경쟁교육이 아닌 연대와 협동의 교육을

해마다 이맘때쯤 ‘막바지 수능 전략’ 같은 신문 기사들이 수능이 다가왔음을 알린다.

초중고 12년의 입시지옥에서 탈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살 떨리는 시험대 앞에 카운트다운을 한다. 이 시기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청소년들 모두 긴장하게 된다. 이제 곧 끔찍한 입시지옥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때문이다. 대학에 안 가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기에 오늘도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야자가 끝나면 학원에 간다. 너무나 끔찍한 입시경쟁 때문에 청소년 두 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청소년들을 더한층 끔찍한 입시지옥 불구덩이로 내몰았다. 일제고사로 초등학생들까지 줄 세워 보충수업과 야자를 시키고, 상위 10퍼센트를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로 고교평준화를 무너뜨리고, 국립대 민영화와 대학취업률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으로 대학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등 미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해마다 교과부는 입시제도 개편안과 수시모집 전형을 내놓는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큰 틀내에서만 12번의 개정

이 시도됐고, 사소하게는 세부조항이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했”다. (진보교육연구소, 박영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의 변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SKY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대학 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바뀌도 청소년들에게는 입시경쟁의 방식이 약간 수정되는 것뿐이다. 숨 가쁘게 달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취업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88만 원 세대들에게 “경쟁”은 평생 넘어야 하는 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프랑스와 핀란드의 교육을 보자. 우리와는 다른 세계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교육복지와 대학 평준화는 지배자들이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따낸 것이다.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학생들의 거대한 투쟁 물결은 1968년 반란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괴물같은 입시경쟁교육에 맞서려면 프랑스처럼 노동자와 학생 등이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동의 사회”를 외쳐야 한다.

이슬기

〈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남역 근처에서 하는 집회시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문 판매조차 금지함으로써 G20경호특별법이 G20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항의 운동엔 족쇄를 채우는 도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안정적인 거리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년 집회 신고를 내고 정기 거리 판매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서초경찰서 스스로 접수한 집회 신고를 번복하면서까지 신문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이에 항의해, 거리 판매하기로 예정돼 있던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추운 날씨에 바빠 지나가던 일부 시민들도 멈춰 서서 팻말 내용을 유심히 읽었다. 한 대학생은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



다. 지난 5일에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의 조회 수도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는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재개할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이명박과 G20의 회의 결과를 폭로하고 이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윤필언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레프트21〉 43호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기사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도 이 비판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지금 운동의 최대 화두인 G20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를 다루는 것인만큼, 이 비판을 기사 중간에 넣을 것이 아니라, 따로 빼서 별개 기사로 다루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진보신당이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회의가 세계경제의 위기의 민중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의제 제안서를 G20 서울회의 준비위원회와 참가국 대사관에 발송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진보신당이 G20에 분명히 반대하기보다는 G20이 모종의 긍정적 구실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G20 개혁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재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와 제국주의

이 글은 아르헨티나의 문화 단체 ‘이성과 혁명(RAZÓN Y REVOLUCIÓN)’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한 인터뷰를 옮긴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제국주의의 상황, 미국 힘의 상태를 탁월하게 짚어낸다.



당신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닌 정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 책의 원래 제목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입니다. 따라서 흔히 알려진 제목과는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레닌과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다른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 즉 동시대 자본주의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1세기 초의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서 제국주의를 자본들 간 경제적 경쟁과 국가들 간 지정학적 경쟁이 상호 작용하면서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결합(데이비드 허버가 윌게 지적한)을 이룬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 최근 저작인 《제국주의와 세계 정치경제학》(2009)이 이 점을 다룹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세계적 열강들의 경제적 활동이 종속국 토착 부르주아지의 발전을 자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정치적 관계를 통해 자벌전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일한 현상을 가치법칙이나 세계적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소신 말씀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정확히 소개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레닌은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불균등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닌은 단지 나라와 지역들 간 경제적 불평등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본래 그런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고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계속 변하면서 지배적 열강들 간 안정적 동맹 결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50년 전에 독일은 가난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지만 자기 시대에 들어 독일이 주요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한 것을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지구적 자본축적 과정의 불균등한 성격 때문에 새로운 열강들이 미래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닌은 확실히 종속이론가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노동귀족론’ 등 이론적 실수를 범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나라와 지역들 간 관계가 가치법칙과 세계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레닌이 공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위기가 제1차세계대전 때처럼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을 낳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들은 약하거나(러시아), 분열해 있거나(유럽연합), 종속돼 있거나(일본), 혹은 신중해(중국) 미국과 맞서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길을 밟을 만큼 절망적 처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당장은 무역과 환율 문제로 그렇고 앞으로 몇십 년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래에 미국과 중국 간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실재합니다.

제국주의 열강과 비교해 중국국을 정의할 때 흔히 외채라는 범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고(故) 지오바니 아리기 같은 급진 학자들은 미국의 외채가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을 보여 주는 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사이에 영국이 겪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출간된 《서브프라임 베이션》에서 허만 슈위츠는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부터 일부 나라들 사이에 금융 이동의 순환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산유국도 이 순환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제와 민간 체계를 사들였고,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훨씬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는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슈위츠는 미국 주책 금융 시스템으로 매개되는 이 금융 순환 덕분에 미국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위츠는 수많은 통계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가 미국이 갈수록 중국의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낳는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잠재적 경쟁자일뿐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 약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19세기 영국과 미국 간 관계가 그랬고 1940년대 미국과 서유럽 간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흥 자본주의의 열강이 패권 국가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슈위츠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금융 이동이 채권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새로운 경제 엘리트가 된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자제들”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통해 유지되는 저임금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억제된 부자들’이라 부르는 일본, 독일과 기타 유럽 나라들도 미국 금융시스템이 만드는 엄청난 양의 채권들 중 일부를 사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들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미국만큼 유동성을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체 상황이 대단히 모순적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30년대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갈등은 갈수록 현 세계 경제 위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로존 위기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독일과 (주로 독일 제품을 수입하고)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린 남유럽 주변부 나라들 간 갈등입니다.

당신은 독점 자본이란 개념이 오늘날 자본축적 단계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독점 자본은 가치법칙, 국제 경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독점 자본이 별로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각 산업 부문을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직된 자본주의’가 절정에 이른 20세기 중반, 한 기업이 국가의 도움으로 특정 국민경제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때에도 그 기업은 국내의 자본의 경쟁 압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몇십 년간 이런 특권적 지위는 사라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크고 산업 내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조차 외국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미국과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너럴모터스의 쇠퇴와 도요타의 부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치법칙은 ‘복수 자본’ 간 경쟁에 의해 관철됩니다. 독점 자본이라는 개념이 단지 한 산업 부문뿐 아니라 (마르크스는 비독점 기업에서 독점 기업으로 넘어가치의 재분배를 말할 때 독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경제 전체에서 경쟁의 종식을 뜻하는 한, 그 개념은 가치법칙의 종말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린과 스위지가 (독점자본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폐기한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런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주장의 전체 조건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독점자본은 경제 전체에 걸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과정 경쟁입니다.

굴리에도 카르메디(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이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이런 경쟁 형태를 가치법칙의 틀 내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월스트의 의미에서》 독점은 존재하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과정을 주로 볼 수 있다.

과정은 크고 선진 기술을 가진 자본 단위들이 선진 기술을 대규모로 투입해 시장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들은 이런 선진 기술의 대규모 투입(따하면 자본 투자로 가능한) 덕분에 시장에서 우월한 경쟁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과정은 경쟁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그들은 작고 약한 자본들이 경쟁 압력을 넣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새롭고 낡은 형태의 상호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부하린은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치군사적 경쟁 형태를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에 부하린은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을 앞두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책 속에서 지적했듯이,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심각한 약점 중 하나는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에서 착취율은 실질임금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진국들의 생산성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곳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물론, 남반구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북반구 노동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남반구는 서유럽 같은 발달된 복지국가들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류 사회화에서 ‘비공식 부



일부 문제제에도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과거와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

독점 단계’로 정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본주의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이론은 일관되지 않은 것이죠. 다 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런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 경쟁 과정에서 탄생한 독점은 경쟁을 없애지 못한다. 그러나 독점은 경쟁을 넘어서면서도 경쟁과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수많은 날카롭고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낳는다.”

저는 독점에 관한 레닌의 분석이 실제로는 과정 경쟁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관료들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를 중재하는 상급 간부층 — 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곧 숙련 노동자들이 식민지 이용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레닌의 노동귀족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관료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것은 레닌

이 아니라 로자 룩셈부르크였습니다. 불균등 교환 이론가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향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남반구의 저임금이 전 세계 잉여가치 착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말이죠. 199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해외직접 투자(FDI)의 3분의 2가 선진국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FDI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인도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월스트리트와 시티의 인수합병 활동 때문에 상당히 왜곡돼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에서 착취율은 실질임금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진국들의 생산성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곳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물론, 남반구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북반구 노동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남반구는 서유럽 같은 발달된 복지국가들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류 사회화에서 ‘비공식 부

부하린은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치군사적 경쟁 형태를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에 부하린은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을 앞두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책 속에서 지적했듯이,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심각한 약점 중 하나는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중심부 부르주아와 종속국가의 부르주아, 두 지역의 노동계급이 모두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와 권력의 지구적 위계질서 때문에 자

본가뿐 아니라 노동계급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북반구 노동자가 남반구 노동자 착취에 참여한다는 레닌의 ‘노동귀족론’이나 ‘불균등 교환론’을 지칭한 것이라면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론들은 마르크스주의 가치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노동귀족론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전 유럽에서 노동자 반란을 주도하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임금에 상대적으로 높고 잘 조직된 철강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 관료들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를 중재하는 상급 간부층 — 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곧 숙련 노동자들이 식민지 이용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레닌의 노동귀족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관료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것은 레닌

이 아니라 로자 룩셈부르크였습니다. 불균등 교환 이론가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향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남반구의 저임금이 전 세계 잉여가치 착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말이죠. 199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해외직접 투자(FDI)의 3분의 2가 선진국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FDI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인도

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월스트리트와 시티의 인수합병 활동 때문에 상당히 왜곡돼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에서 착취율은 실질임금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진국들의 생산성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곳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물론, 남반구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북반구 노동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남반구는 서유럽 같은 발달된 복지국가들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류 사회화에서 ‘비공식 부

부하린은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치군사적 경쟁 형태를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에 부하린은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을 앞두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책 속에서 지적했듯이,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심각한 약점 중 하나는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반전시위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적 경쟁이 제국주의로 비화한 현재 사례다.

문’으로 정의하는 존프롤레타리아와 소상인들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물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북반구 노동자가 남반구의 동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식민지나 반(半)식민지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17세기와 18세기 제국과 식민지 간 관계와 20세기 이들 간 관계는 어떻게 달랐나요?

식민지 관계는 직접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175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지속된 영국과 인도 간 관계가 그랬죠. 레닌은 반식민지론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국이지만 금융적 외교적으로 종속된 다양한 [국가] 형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1914년 이전 중국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존재했던 영국의 ‘비공식적 제국’을 들



올해 3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파병 미군을 둘러하는 오바마 아프가니스탄은 오바마의 전쟁이 됐고, 오바마의 수렁이 될 것이다.

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유심히 봐야 하는데, 레닌이 지적했듯이 ‘반식민지’ 지배계급이 형식적으로 주권을 가질 때에도 그들은 다른 국가에 식민지로 종속된 경우보다 자가 남반구의 동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 순전히 형식적 검토습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차이를 낳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른바 ‘반주변부’로 불리는 국가들 — 중국, 인도, 남한, 브라질, 남아공 — 을 ‘반식민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권과 국가 간 체제가 낳은 기회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본축적 기반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제한된 지면에 답하기에 너무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 간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패리 앤더슨이 말했듯이 영국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그것이 전(全)자본주의 집단들 — 동쪽의 공납제 제국과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 — 과 경쟁하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영국은 무굴 제국의 잉여 수취 메커니즘을 계승했습니다. 나중에 인도가 갈수록 자본주의 순환 과정에 편입돼 갔지만 말입니다.

영국 패권이 절정에 도달한 19세기 중엽에도 팔마톤 경은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와 러시아 같은 대제국과 대적해야 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 같은 자본주의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영국 제국주의는 비로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영국을 제치고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패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주도 아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 유엔, 나토 등의 제도를 건설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래 미국의 역대 정부들이 시도한 것은 미국 주도의 제도화된 협력 구조를 지속하고 확대(예컨대 나토와 유럽연합의 확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상황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의 성장이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협력 구조의 밖에 있거나 그곳에서 주변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 포럼으로서 G8을 G20으로 대체하려는 — 시도화한 협력 체제를 확대해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공간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웨이드는 G20을 미국이 브릭스 국가와 유럽연합을 이간질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저의 해석과 그의 해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질문은 제한된 지면에 답하기에 너무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 간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유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윌리엄 애블럼 윌리엄스가 (미국 외교의 비크)(1959)를 쓴 이래로, 미국을 ‘비영토적 제국주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얻는 것보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지배하는) 열린 세계 시장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큰 틀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죠. 히틀러가 독일은 다른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무력을 사용해 유럽 대륙에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 시도가 군사적 패배

로 실패하지 않았을지라도, 무한정 제국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치 국가

는 억압과 테러만으로 당시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을 통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비영토적 지배 전략이 좀 더 실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주의가 경쟁자들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먼저 제2차세계대전 중에, 또 냉전 중에 미국이 발견한 것은 이 전략을 실현하려면 미국이 군사력을 광범히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대와 1941년 사이, 그리고 1945년 직

후, 미국은 영국이 유럽에서 중요한 군사적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군대를 보내 독일을 패배시켜야 했고, 나중에 특히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소련을 봉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과 공군 기지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2차세계대전 후 이런 과정에 착수했고,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들

은 태평양 군도들을 점수하고 크게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이 벌였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이 힘을 행사하는 주권 수단을 왕립해군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연속성을 보는 것은 중요하

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보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점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민족해방론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해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미국 제조업계는 중국의 경쟁국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중국은 다른 선진국은 따라오지 못할 놀라운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의 중요한 실례로 이 성장이 계속된다면 세계 질서에 큰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자본주의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양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올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다지만,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된다. 중국 1인당 소득은 미국의 10분의 1에 그친다.

약점

중국 무역수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강점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빼고 거의 모든 선진국가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중국이 핵심 부품을 일본, 유럽, 한국, 타이완 등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양의 첨단 제품을 수입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들 나라 기업의 생산기지 구실을 하기 때문이고, 좀더 근본적으로는 서방 다국적 기업과 극소수 동아시아 기업이 첨단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9년에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의약품, 건설 장비, 농업 장비 등 핵심 산업에서 다섯 개 안팎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50~1백 퍼센트를 차지했는데, 그중에 중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면, 미국 기업은 이들 분야에서 모두 한 개 이상 포진해 있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전 세계의 '공적'으로 만들려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과장하곤 한다.

중국은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지 못하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할 수 없다.

중국이 필사적으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의 강점 뒤에는 약점이 숨어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의 외환 보유고 2조 3천억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고로는 1위 규모지만, 미국 10대 기업 주가만 합쳐도 이보다 많다(약 2조 4천억 달러). 대다수가 미국 월가에 근거를 둔 5백대 자산관리사들은 중국 외환 보유고의 서른 곱절에 이르는 돈(64조 달러)을 굴리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상품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부 동아시아 나라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경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일본, 독일과 유럽 나라들의 국내총생산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퍼센트다.

물론, 경제 위기 발생 후 이 나라들은 중국의 수입 확대에 의존해 성장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중국의 외교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지적

했듯이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90년 일본보다 작다.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더라도 당분간은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 촘촘하게 연결된 4백여 개 군사 기지와 동맹들을 통해 행사하는 전 세계적 영향력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

중국이 2008년 아프리카에 합대를 파견했을 때 '최초의 해군 파병'이라 떠들썩했던 것을 보면 중국 힘의 세계적 투사력이란 것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2론이나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 사실이 아니다.

기대

보통 좌파들이 중국의 힘을 과장할 때는 중국의 부상이 진보적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는 소망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사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경제 군사 강국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 국가가 국제적으로 진보적 구실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먼저, 최근 환율 전쟁이 보여 주듯이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 수많은 이기적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이 싸움에서 중국이 이기

든 미국이 이기든, 결과는 경쟁적 통화 가치 저하를 통한 '밀바다'를 향한 경주일 뿐이다.

또, 중국은 규모에서 아직 미국에 못 미칠 뿐 만만치 않은 제국주의 개입 역사를 가지고 있다.

티베트와 신장은 가장 눈에 띄는 사례일 뿐이다.

흑자는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 준 '진보적' 입장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이라는 위선적 근거로 북한과 이란을 손보지 못하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급진 개혁을 펼칠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이 조성된 핵심 이유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 세력의 반발 때문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었다.

중국 국가는 이런 저항을 돕기는커녕 2001년 열강들 중 '테러와의 전쟁'에 가장 먼저 찬성했고 이라크 침략 전에도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이내 포기했다. 오히려 부시가 이라크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에는 전쟁에 반대한 다른 열강들에게 미국이 이긴 현실을 받아들이길 것을 권유했다.

불의하고 폭력적인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맞서는 투쟁에서 중국은 결코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없다.

김용욱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고 반대하지만 말고, G20의 논의에 개입해서 의제를 제안하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진보신당 지도부의 생각을 보여 준다.

그러나 G20은 개입해서 진보적 의제를 채택하라고 요구할 기구가 아니다. 항의하고 반대해야 할 기구다. 지난 네 차례 회의의 결과는 G20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떠넘기고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기구임을 보여 줬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G20이 대표성도 없고, 위기 해결 방안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G20 회의가 금융규제 등을 합의하는 '좋은'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는 셈이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G20이 대표성도 없고, 위기 해결 방안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G20 회의가 금융규제 등을 합의하는 '좋은'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는 셈이다.

당 대표인 조승수 의원은 G20 정상회의 지지 국회 결의안에 반대 투표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실천은 진보신당 지도부의 개혁주의를 보여 준다. '책임 있는 공당'이 정책 대안 없이 '거리 정치'만 해선 안 된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제안서는 G20 회의가 간단히 무시해 버리면 그만일 뿐이고, 투쟁보다 '명망'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는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지배계급이 진보적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게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G20의 반동적 대안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김문성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G20 회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회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진실의 일면이 담겨 있다. G20의 내 국제공조가 불발로 끝나기 일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제 합의도 불발로 끝났고, 파생상품 국제 규제도 말잔치로 끝났다. 환율 갈등도 미국·중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G20 회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위험한 사령탑이다.

국·독일 등 수출 강국들 사이의 물고 뜬는 각축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국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고 동시에 경

쟁국에 더 부정적일 만한 제안들을 내놓고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합의가 별 효과 없는 내용에 그쳤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측면도 보야 균형있는 시각이다.

G20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노동자들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는 데에서는 서로 공조하고 있다. 긴축 정책이든 주로 부자들을 살리는 경기부양책이든 그 안에는 복지 삭감이나 해고 같은 노동자 내핍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균형 있는

또, G20은 세계경제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세계 핵심 지배자들의 콘트를 타워다.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한 조모 순다람 유엔 경제사회국 경제개발분야 사무부총장은 'G20 정상회의 체제 이후 세계적 사안에 대한 모든 논의가 G20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유엔이 소외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별도의 사무국이 없다는 점을 G20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견해도 일면적이다.

트로이카(Management Troika) 제도를 통해 전임·현임 그리고 후임 의장국이 일종의 관리단을 구성해 의제·발표자·토론자·초청국·참가단체 선정, 성명서 작성, 연구그룹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각종 회의에서 공동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국이 임기 1년 동안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G20은 세계경제 위기로 격화된 각국 지배계급의 분열로 공조가 불발이 부지기수인 한심한 기구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한 자들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G20 항의 운동의 정치적 중요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김여진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 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연명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전략적 의미에서 복지국가가 갖는 의미는 투표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 즉, 임금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을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복지연합(동맹)’이라 부른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복지 재정 부담자(납세자 혹은 보험료 납부자)와 복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며 이것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갖는 정치적 의미의 핵심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 이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

먼저, 동맹의 문제다. 곧, 누구와 어떤 동맹을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다수 개혁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복지동맹

이 토론에서 모든 발표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빼고는 누구도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복지 확대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없다면 동맹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세력은 노동자들이 아니게 될 것이다. 흔히 개혁적 정치인이 그 구실을 떠맡을 것이다.

물론 모든 거대한 사회 개혁 투쟁에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는 어느 계급이 이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 확대에 저항하는 세력 즉, 자본가들에 맞서 싸우는 데서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다른 사회 집단을 모두 합친 것 보다는 크다. 자본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 반대·무상의료 캠페인 복지 확대는 단결한 노동계급의 힘으로 가능하다.

주의 동력인 이윤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이 강력하고 거대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도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몽상이다.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린 전후 장기 호황 시기에도 복지 확대를 이룬 동력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토론자 중 한 명이었던 우석균 실장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복지국가는 “자본층의 동의를 전제로 한 복지연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나긴 노동운동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대체로 계급 투쟁보다는 의회와 선거를 통한 개혁을 추구한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집권 전망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적 대안을 찾다 보니 민주당과의 동맹 문제로 이끌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이해관계자를 최대한 확대하는 연합과 동맹이 필요한데 이는 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대한 복지국가정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아예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한다.

“최근의 민주당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지지’와 ‘독자적 정치세력화’도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고,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동맹이 어떤 문제를 낳을지는 이날 발표자 중 한명이었던 신동면 교수의 주장이 잘 보여 줬다. 신동면 교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에 쓰자는 사회복지세를 놓고 “복지를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여 불필

요한 정치적 논쟁과 저항을 유발하는 것은 복지연합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신 교수의 ‘정의로운 복지’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신 교수는 특히 “복지국가 운동은 반자본 운동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동맹은 복지국가 건설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의 정당이기 때문

이다.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에 저항하는 자본가들은 고사하고 복지국가에 미온적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제압할 능력도 없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강력한 투쟁,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노동계급 정치다.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자본이 부담할 것인가, 노동자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소득의 문제’로 바꾸어 놓는다.”

개혁주의자들의 증세론 근거는 조세부담률(GDP 대비 조세수입)이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같은 수치들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 기업주·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수준에 대면 한국 노동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지난 2009년 산업은행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은 “한국의 임금 수준은 국가 경제 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주희, ‘산업경쟁력의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구조 변화전망’).

각국의 시간당 인건비를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시간당 인건비 / 1인당 GDP) 독일은 0.25, 미국과 일본도 각각 0.18, 0.19 정도인 반면 한국은 0.15밖에 안 됐다. 풀어서 말하자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독일 노동자

들이 임금의 40퍼센트를 세금으로 제한된 뒤 받는 임금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의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적기 때문이지 결코 노동자들이 적게 부담해서가 아니다.

우석균 실장은 “OECD 평균 기업주의 사회복지지출 기여비율은 GDP의 5.4퍼센트이고 노동자들의 기여비율은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업이 2.5퍼센트, 노동자가 3.3퍼센트다. 노동자는 이미 더 내고 있고 기업주가 덜 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장호중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넓은” 양보론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넓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는 노동자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계급 역관계와 정치현실”에서는 정부와 기업주에게 재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 있는 시

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누구나 정당한 권리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을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편적 증세에 기울어져 있다. 복지국가를 투쟁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선 보편적 복지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더 일반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사람들을 설득해 “깨어 있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넓은 진보”가 정부와 기업주를 상대로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그가 “줄기차게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의 진보대통합 구상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급진좌파를 배제하고 민주당의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와 연합하자는 것이다.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이 내는 돈이 적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3퍼센트에 그쳐 유럽 복지국가들의 14퍼센트나 이웃 일본과 대만의 8.5퍼센트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 때문에 우리네 가계의 80퍼센트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구입하고 있다.”

이 교수를 비롯해 시민회의는 공급자 통제, 곧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나 기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낮은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OECD 평균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

기여 비율은 5.4퍼센트이고 노동자는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업이 2.5퍼센트, 노동자가 3.3퍼센트다.”(우석균, 〈프레시안〉)

“월 1인당 보험료는 2004년 3만 3천 원에서 2008년 5만 원으로 [약 52퍼센트] 늘었다. ... 반면 국고지원은 ... 16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최윤정, 《사회운동》 7~8월호)

그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요구를 두고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다급한 여러 복지 분야보다 앞서지는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그 동료들은 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캠페인을 ‘최우선’ 사업으로 올려놓았을까?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국가 재정과 기업 이윤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 약 37퍼센트를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도달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전체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 43.5퍼센트에 이르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원은 부자 증세여야 한다.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퍼센트밖에 안 된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삶과 복지를 최우선 순위 놓으려면 대중 투쟁은 필수적이다. 필요한 것은 이 투쟁을 강화할 정책이다.

김문성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며’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써서, 신임 노동당수인 밀리밴드에게 장하준을 만나보라고 권할 정도로 극찬했다.

《23가지》는 신자유주의 정치인·경제학자·언론이 퍼트리느 혼한 23가지 주장들을 명쾌하게 반박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주장으로 엮인 책이다. 흥미진진한 주장들로 구성된 이 책은 어느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통렬하면서 재미있다.” 특히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장하준의 주장은 최근 한국에서도 벌어진 부자 감세 논쟁에서 진보진영에 좋은 무기를 제공한다.

이번 책을 장하준의 이전 저작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장하준은 “이전 책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시각에서 쓴 각론이었다면 이번 책은 선진국까지 포괄한 총론”이라고 밝혔다.

장하준은 이전 저작들에서 자유무역과 민영화, 지적재산권 강화, 금융 자유화 등이 경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신자유주의 신화를 반박해 왔다. 《23가지》는 이번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복지 제도 파괴, 계획 경제 등에 대한 주장도 비교적 자세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 지향적 모습이 더 분명하다.

이런 변화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심대한 타격을 입자, 장하준의 자신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이상

우선, 많은 언론들이 《23가지》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소개한 것을 살펴보자. 장하준은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다”며 이 시대의 이상을 공격한다.

탈산업화론자들은 이제 투자 증대보다 지식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진보진영 상당수도 이를 받아들인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신기술의 발명은 종종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환상을 낳는다.

1990년대 말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IT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자 경제가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고 경제 위기는 옛 이야기라는 ‘신경제론’이 유행한 바 있다. 1920년대에도 자동차·라디오·전화의 대량 생산과 보급은 오늘날과 비슷한 환상을 유포했다. 그러나 이런 환상들은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IT 거품 붕괴로 처참하게 무너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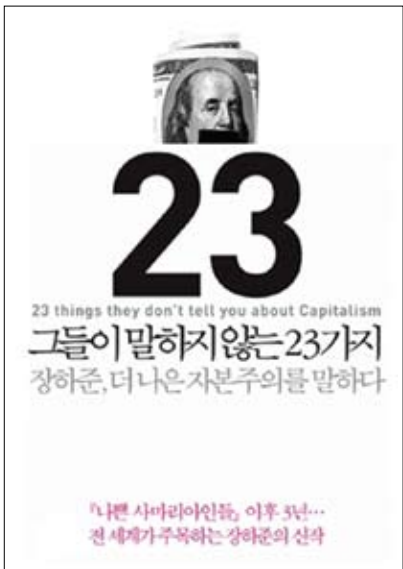
사실 장하준의 탈산업화론 비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은 투자의 증감에 달려 있다는 마르크스·케인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옳지만 장하준의 분석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의 약점도 드러난다.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장하준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면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하준은 부자 감세 논리를 통렬하게 비판하지만 투자 감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장하준, 부키, 1만 4천8백 원, 367쪽

일자리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유보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투자도 감소된다.”(43쪽)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기업들이 배당 등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내 유보 이윤 또한 증가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에 상장된 6백여 비금융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1백조 원이 넘는다.

게다가 배당금 지급이 사회 전체의 이윤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배당과 연봉 지급은 부자들이 그 돈을 자기 집 금고나 장판 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돈은 늘어났다. 게다가 국가는 온갖 규제를 없애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했지만 부자들은 파생금융상품 등 투기에 매달릴 뿐 생산적 투자는 회피했다.

사실 장하준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고성장기 한국처럼] 좋은 사업 기회를 계속 찾아낼 수 있는 나라에서라면 299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층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도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대로 별로 돈을 벌 확률이 없는 곳에서는 29개를 허가받는 것도 너무 성가서 보일 것이다.”(259~260쪽)

결국 1970년대 이후 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1백50여 년 전에 마르크스가 분명하게 지적한 자본주의의 ‘이윤을 저하 경향’, 또는 70여 년 전에 케인스가 모호하게 제시한 ‘자본의 한계효율 체감’과 관련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밝혔듯이, 전 세계 자본주의는 1960년대 말 이후 이윤율이 떨어져 왔다. 복지·임금 삭감과 부자 감세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들의 이윤 몫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이 조금 올랐지만 그 수준은 196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따라서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하준은 이 점이 분명하지 않아 투자를 늘리는 공색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가 “각종 정책 수단(예를 들어 부자와 기업의 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197쪽)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가 온갖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투자가 늘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반면, 케인스는 “투자의 다소 포괄적인 사회화가 완전고용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다” 하고 급진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물론 케인스는 부자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늘 부족한 대안만을 제시했지만 말이다.

결국 장하준의 대안은 어정쩡한 타협인 셈이다. 그런데 어정쩡한 타협 시도는 기업주들의 반발로 좌초되기 십상이다. 최근에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약간의 은행세를 물리려하자 2008년 위기 이후에 영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거대 은행들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라. 기업 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할수록 재산 이전, 투자 철회와 같은 부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적 계획과 통제

그런데도 장하준이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14쪽)이

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장하준이 소련의 붕괴를 보고 사회 전체의 계획 경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 있다.

물론 장하준은 사람들의 상식에 도전해 “우리가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고, 각국 정부는 거대 공기업들을 운영하고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기업들은 철저한 사업 계획 하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영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만약 이 화성인이 지구상의 기업[계획, 조직]을 녹색으로, 시장(거래)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 그것은 아마 ‘녹색 점을 연결하는 빨간 선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빨간 선으로 상호 연결된 큼직한 녹색 영역들의 집합’이 될 것”(274~275쪽)이다.

마르크스는 개별 기업에서 자본가들의 독재적인 계획을 노동자들의 민주적 계획으로 대체하고, 사회 전체의 계획도 노동자들이 참여해 결정해야만 사회적 자원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장하준은 소련의 예를 들며 전체적인 계획은 불가능하고 부자들의 의지에 좌우되는 시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소련]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경영 성과를 올리려 발버둥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265쪽)거나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267쪽)는 ‘상식’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반박은 장하준이 소련을 비판한 다음 주장과 모순된다.

“인간을 우주로 보낼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은 빵이나 설탕 같은 기초 식료품 하나를 사려 해도 길게 줄을 늘어셔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은 문제없이 대량 생산해 내지만 괜찮은 텔레비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264쪽)

소련의 지배자들은 생필품을 만들 인

센티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핵무기를 만들 인센티브는 있었던 것이다. 경제가 복잡해져 중앙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복잡한 최첨단 부품이 텔레비전·휴대폰·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을 소련이 문제없이 대량 생산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오히려 소련 인민들이 곤란을 겪은 것은 빵과 설탕처럼 단순한 계획으로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장하준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의 방향과 결과도 결정이 된다”(16쪽) 하고 말한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군사적 경쟁 압력에 따라 핵무기와 핵잠수함 등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생필품 부문에는 자원을 배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결국 소련 사회에는 이윤 추구에 목숨을 걸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개별 자본가들의 독재적 계획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대신 서방과 군사적 경쟁에 목숨을 걸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관료들의 독재적 계획이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실패는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의 실패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다.

소련에 대한 분석과 논쟁은 20여 년 전에 사라진 체제에 대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요즘 대안 논의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봤듯이 장하준은 위기를 끝내려면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방안은 자본가들의 방해에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뛰어넘는 전망을 가져야만 그들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나아가 그 힘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 사회적 부를 인류의 복지를 위해 제한없이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장하준이 끝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안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주창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나올 수 있다.

강동훈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2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기륭전자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낸 여성 투사들



6년 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정규직 직접고용을 쟁취한 기륭전자 노동자들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긴 투쟁으로 값진 승리를 이뤘다. 2005년 7월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선 지 무려 1천8백95일 만의 일이다.

기륭전자는 조합원 열 명을 1년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약속했다. 또 해고 기간의 임금과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가압류, 손해배상, 고소, 고발 등 모든 민·형사상 소송 등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단식농성, 고공농성, 3보 1배 등 그야말로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기륭전자 투쟁을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과 연대 확산에 힘썼다. 특히 2008년 촛불항

쟁 때 그런 노력은 두드러졌다. 당시 김소연 분회장은 무려 94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래서 촛불 속에서 급진화된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일터의 광주병 비정규직”은 당시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이 만든 구호였다.

김소연 분회장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에는 많은 네티즌들도 함께했어요. 2008년 투쟁이 없었으면 이번 타결은 없었을 겁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투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사측도] 안 것이죠” 하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를 앞두고 기륭전자의 투쟁이 더 커질 것도 우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지금이 투쟁을 밀어붙여야 할 때”라며 투쟁의 박차를 가했다. 결국 지난 6여 년 동안 “죽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사측은 무릎을 꿇었다.

김소연 분회장은 6년간 투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비정규직 투쟁이 장기화되면 싸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에서조차 졌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정규직 고용을 따냈습니다.”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2년 이하 비정규직인 기륭전자의 승리는 더 뜻 깊다.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는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더 큰 투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조명지

동희오토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한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소중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조합 설립 후 5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 지 1백13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9명 전원 복직, 일시금 일인당 1천만 원 지급, 고소고발 취하, 금속노조 조합 활동 인정 등을 얻어냈다. 핵심 요구들을 거의 대부분 쟁취한 것이다.

기륭전자 분회에 이은 동희오토 지회의 통쾌한 승리는 비정규직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투쟁하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을 보고 힘을 얻었고 승리 소식에 기뻐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의 생산직 9백 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하청업체 17곳에 소속돼 있다. 동희오토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평균 근속년수가 1년밖에 안 되는 ‘절망의 공장’이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거나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해고됐다. 지금까지 1백여 명이 해고됐다. 현대기아차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교섭

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양재동 본사 앞에서 끈질기게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이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니까 결국 뒤로 물러선 것이다.

동희오토 이백윤 지회장은 “원청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것은 현대기아차 원청이 [동희오토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했다” 하고 말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수많은 사회·학생 단체 등은 용역을 동원한 집회 방해, 고소고발 등 모진 탄압을 견뎌내며 농성을 지속해 지지 여론을 형성했다.

“공동농성단이 함께 투쟁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공동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백윤 지회장의 말이다.

사측은 동희오토 투쟁이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더불어 이명박은 G20 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현장으로 돌아가 노조를 재건하는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동희오토의 투사들은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해 기아자동차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모승훈



소중한 승리를 거둔 힘을 바탕으로 노조 재건과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KEC 투쟁

점거는 풀었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11월 11일 KEC 투쟁 지원을 위한 4시간 파업을 한다.

KEC 노동자들은 악랄한 노조탄압의 대명사가 된 “KEC 사측 뒤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폭로된 정황을 봐도, 이명박 정부의 경찰과 사측은 김준일 지부장의 분신 사태를 낳은 ‘짹짹미 검거작전’까지 펼쳤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노조 탄압을 지속해 왔고, 특히 영남지역의 노조들을 집중 공격해 왔다. KEC지회는 바로 그 표적의 일부였다. 발레오만도, 대림자동차, 상신브레이크 등에서 노조 탄압, 직장폐쇄, 민주노총 탈퇴 기도가 이어졌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금속노조·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파업에 앞서서 민주당과 공조해 KEC 점거농성을 해제시키며 연대파업의 동력을 가라앉히는 잘못을 범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진보정당 지도부에게 타협의 압력을 가하고, 민주노총·진보정당 지도자들이 KEC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점거를 끝내게 만든 것이다.

당시 KEC 점거파업은 투쟁의 도화선



진보정당

이 되고 있었다.

분신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공장 점거파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노동자들을 자극했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이명박의 오찬 초청을 거부하게 하고 금속노조 지도부로 하여금 파업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때마침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투쟁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이런 힘과 열기를 바탕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정부를 압박할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을 추수하는 민주노총·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사태를 그르쳤다.

KEC 투쟁에 연대해 온 쌍용차지부 신동기 조합원은 이런 ‘중재’를 비판했다.

“지난해 쌍용차 파업 때도 추미애가 공장 안에 들어와 농성해제를 요구했어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KEC지회 한소정 부지회장도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레프트21>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농성을 풀게 돼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 스스로 농성 해제를 수용하게 됐지만, [공장 밖으로] 나가기도 뭐하고 버티기도 뭐한 상황이에요.”

KEC 점거농성 해제로 사측과 정부는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 농성 해제 뒤 교섭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측은 시간만 끌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파업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서명까지 강요하며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도 마지막까지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 간부 네 명을 구속했다.

그룹에도 지금 KEC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월 연대파업 이후에도 KEC 투쟁에 대한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박설

한진중공업

다시 파업에 들어가다

한진중공업이 2년이 다 되도록 수주를 하지 못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10월 2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진중공업 사장 이재용은 “내년 이후에는 영도조선소의 수주물량이 전혀 없으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진중공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 2천2백76억 원, 영업이익은 4천6백9억 원이었다. 올해 들어 6월 상반기까지 매출액은 1조 3천2백95억 원, 영업이익은 1천5백99억 원에 이른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조선업 주가가 상승했는데 한진중공업 회장 조남호의 주식자산은 1천5백88억 원에서 2천6백72억 원으로 68.3퍼센트가 증가했다.

결국 한진중공업은 현금을 수천억 원 쟁여 놓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자산이 있으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배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미 2009년 말 4백여 명이 명예퇴직으로 공장을 떠났다. 계속되는 휴직 확대와 조업 단축으로 노동자들은 막대한 고

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측의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리던 조합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막았다며 10월부터 부분파업을 벌였고, 11월 8일부터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지속적 투쟁에도 사측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업이 많지 않아서 파업의 실제적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사측은 그나마 있는 물량도 일용직·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더 강력한 투쟁을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휴업도 늘리는 마당에 짬짬 끊김 파업해야 사측만 좋아한다. 조합원들은 월급도 못받고 몸도 힘들니 지치는 기색이다. 지도부가 구심이 돼서 밀어붙여야 한다. 출일 봉쇄하고 공장에서 버티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도 “작년에 해방선의 시운전을 막았던 것처럼 위력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이 필요하다.

조명지



뉴스는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가

서평



《9시의 거짓말》
최경영, 시사IN북, 1만 2천 원, 260쪽

여러분은 뉴스에서 원하는 기사를 보고 있는가? 왜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몸에 불을 붙여야만 했는지, 왜 여성 노동자들이 1천8백95일을 차디찬 바닥에서 농성을 해야 했는지, 왜 노동자들이 ‘국가적 잔치’라는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는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기대를 포기한 지는 오래다. 언론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다.

《9시의 거짓말》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자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했고, 그 때문에 스포츠 중계팀으로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KBS 휴직 기자가 쓴 책이다.

“사실 이 책은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 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집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습니다.”

저자는 기자가 고용된 월급쟁이가 되어 ‘받아쓰기’ 기사를 쓰고, 진실 보도보다 당장 돈 되는 보도를 우선시키고,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포장하며 ‘기득권 계층의 애원권, 치어리더, 확정기’가 돼 버린 언론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뉴스가 허위 의식을 유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언어의 몰타기”)를 설명하는 대목은 흥미롭다.

허위 의식

가령 뉴스는 ‘대량해고’ 대신 ‘구조조정’이란 단어를 쓴다. 평소에는 ‘근로자, 직장인’이라 부르다가 파업할 때면 ‘노동자’라고 부르며 ‘폭력, 불법, 집단 이기’ 등의 상징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 중인 직장인’이란 말을 뉴스에서 듣지 못한다.

또, 뉴스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핵심 쟁점과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국가 경제의 치명타’라고 부르대던 언론들이 이견회나 정몽구가 수조 원을 탈세하고 재판을 받으면 ‘국가 경제가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엄살’을 부린다.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언론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뉴스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논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적 이익’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부동산 관련 연구소, 교수, 학자들은 부동산 투기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



김미아 기자

7월 15일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KBS 기념 탑재의 밤’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하지만 방송에는 ‘객관적인 전문가’로 포장된다.

기자들의 주요 취재원은 ‘국민들’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 집단”이다.

저자는 언론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의 병폐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언론 노동자들에게는 “대중을 ‘호구’로 보지 않는” “비싼뉴스”를 만들어

야 한다고 충고하고, 대중에게는 “언론의 자유는 대중의 자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대중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애당초 우리 것이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서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본디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쩍 심해진 언론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미진



〈부당거래〉 류승완 감독

떡값 검찰과 조폭 경찰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다

영화평



‘경찰의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 실패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경찰 고위층은 승진에 목을 맨 광역수사대 경찰 최철기에게 가짜 범인이라도 세워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다.

자신의 스폰서인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자 장석구를 통해 ‘범인’을 만들고 사건을 짜맞춰가는 과정에서 최철기는 검사 주양과 충돌한다. 검사 주양은 최철기 때문에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가 구속된 것에 화가 나 최철기의 뒤를 캐는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가 아닌가? 영

화 〈부당거래〉의 내용은 전혀 낯설지 않다.

지난해 용산참사로 저항이 계속되자 정부는 당시 터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청와대 행정관)로 여겼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위험천만한 진압 작전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철거민들을 죽게 만들었고, 검찰은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을 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본 떠서 만든 듯하다.

〈부당거래〉는 각자 스폰서를 끼고 ‘작업’을 일삼는 떡값 검사와 조폭 경찰 그

리고 그들과 유착해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의 은밀하고 아슬아슬한 ‘부당거래’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류승완 감독은 제작노트에서 “사회 고발”, “현실 비판”의 메시지가 아닌 치열한 조직 사회에서 먹고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검사, 스폰서들이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추악한 행태와 뒷거래를 그려 내는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생생한 ‘사회 고발’과 ‘현실 비판’으로 보인다.

이 영화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여

성노동자들이 줄초상을 치르는 사이 기업주들에게 ‘용돈’과 ‘서비스’를 받는 검사를,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몽둥이질을 하면서 기업주들만 싸고도는 경찰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공감 때문이 아닐까.

영화가 보여 주는 돈과 권력을 위한 씨줄과 날줄의 먹이사슬도 진실을 향한 저항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용산참사 직후 저항 무마용으로 이용하려다가 결국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킨 것처럼 말이다.

최윤진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연사: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11월 17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여성능력개발원 1강의실 (건대입구 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남부 사회포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연사: 백은진 (다함께 활동가)
일시: 11월 25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 은행 건물 6층)
참가비: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노동 교육선전차장)
일시: 11월 25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서울 서부 사회포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5일 (목) 오후 8시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교실, 물구나무 다섯 번째 이야기 동성애는 비정상인 걸까?

연사: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일시: 11월 20일 (토) 오후 1시 30분
장소: 대학로 흥사단 (혜화역 2번 출구에서 발바닥 안내를 따라오세요)
참가비: 1천 원 (간식비와 토론준비 비용)
문의: 010-8827-0319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이메일: alge@paran.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lgetorum>
사무실: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이메일: atgwestmail@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사무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이메일: algsouthmail@jinbo.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hambu_forum
사무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이메일: jaalltogether@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lgibforum>
사무실: 서울 중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학생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학생회는 학내 문제만 다뤄야 한다’, ‘특정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학생회 활동가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는 것이 대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김예슬 선언’이 고발했듯, 대학에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고 모두들 “글로벌 대학”을 외치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등록금 인상, 학문 줄 세우기, 콩나물 강의실과 부족한 전임 교원, 자치활동 탄압, 피 말리는 경쟁, 재단 비리 등.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대학의 신자유주의 화와 기업화, 정부의 교육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필요하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사회 문제와의 연결을 피하는 태도로는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정치 중립을 표방하는 학생회가 종종 사언품을 나눠 주는 이벤트업체처럼 구는 데 그치거나, 존재감 없이 임기를 마치곤 하는 것은 ‘비정치성’이 학생들의 권익 대변에 효과적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학생회가 사회운동에 참가하지 말고 학내 문제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사건들은 대학생들의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종종 학내 쟁점보다 정치적·사회적 쟁점이 대학가를 압도하고, 학생회가 그런 쟁점에 우선 대응해야 할 때도 많다. 1980년대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중요한 사회운동에 대해 학생회가 입장을 표명하고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 이른바 ‘비권’으로 분류되는 학생회들조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항쟁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경제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학생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대중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학생회의 사회운동 참여는 학생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학생회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온갖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는 저항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학내 쟁점 우선주의나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지배자들의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좌파가 학생회를 운영할 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선명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진보적 학생회를 지지하면서도 학생회가 특정 정치색을 내세우면 학생들 간의 단결을 해친다고 여겨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좌파들이 종종 학생회를 특정 정치조직의 전유물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편향이기도 하다.

물론 학생회는 정치조직처럼 단일한 정치 원칙과 강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일체가 아니다. 이질적인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학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개방해야 한다.

이럴 때 특정 정치조직의 강령을 다른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 그 학생회는 더는 공동전선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단일한 정치 경향의 사람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간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공통의 요구들 — 사회적으로 그리고 해당 대학에서 당면한 문제들 중심의 — 을 중심으로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최미진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G20 반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라 규정했다.

행진은 “지금의 경제 체제는 자본들의 축적방식이 금융적으로 변모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통제’ 요구가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적 금융자본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행진이 주장하는 금융 통제 요구들은 지지할 만하다. 금융거래세 도입 같은 것은 국제 반자본주의 운동의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한다든가, 축적방식이 바뀌었다는 행진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금융 자체는 가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금융의 이윤은 생산 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화는 새로운 축적체제가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처였다.

또, 이런 주장은 우선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금융자본이 고작 2개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잘 구분되지도 않는다. 많은 산업자본이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고 금융 투기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행태를 쫓

는 것이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자본이 문제지 자본의 일 분파(금융자본)만 문제 삼는 건 개혁주의적 해결책으로 미끌어질 수 있다.

실제, 행진은 ‘금융세계화’라는 관점 때문에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 금융거래세 도입, 공적자금의 민주적 통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 등 ‘금융 통제’ 방안만을 불비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요구들은 그 자체로 지지할 만한 것들이지만, 경제 위기 원인을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주로 금융에서 찾는다면 개혁주의적 대안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투기” 같은 “불안정성의 핵심요인을 통제하고,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행진의 주장은 그런 점을 보여 준다.

공동전선

물론, 행진도 “금융통제 자체만으로 궁극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행진은 좌파의 비판에 때로 엉뚱한 왜곡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예컨대 행진은 “다함께”가 “이라크 전쟁을 미국과 유럽의 대리전으로 분석”(2010 대안세계화학생포럼 자료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

부터 이 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공이라 규정하고 반전운동 건설에 앞장 섰던 ‘다함께’에 대한 황당한 곡해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행진이 주도해 만든 ‘G20 반대 대학생운동본부’는 G20에 반대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이라기보다 자신을 고유의 강령을 선언하는 수단에 가깝다. G20을 앞두고 광범하게 단결해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가 이에 반발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또, 이들이 행진의 금융 통제 주장에 대해 “결국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넘어서는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일리 있다.

다만 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가 “자본가들의 금융 규제와 과연 차이점이 있느냐”며 “G20 국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금융안정망 강화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까지 비판한 것은 너무 나아갔다.

이런 식의 초좌파적 주장은 개혁주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못 된다. 그보다는 공동전선적 관점에서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그 올바름을 대중적으로 입증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응일 것이다.

박건희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인 투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상황은 이런 자본주의의 본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

2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켰듯이, 2008년 겨울과 2009년 초 사이에 주도적 자본주의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한 덕분에 경기 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할 수 있었던 공황으로 빠져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현재 경제는 ‘회복 중’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모순적이다. 중국은 국영 은행들이 뒷받침한 어마어마한 투자 증가 덕분에 지난 18개월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다.

덕분에 중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많은 나라의 경제가 동반 성장했다. 여기에는 브라질 같은 천연자원 수출국과 독일 같은 첨단 제조업 제품 수출국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 경제는 저성장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실업률 통계만 봐도 왜 오바마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자리 찾기에 지친 사람들과 더 일하고 싶지만 시간제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미국의 실업률은 노동력의 17퍼센트에 이른다.

10월은 지난 6개월을 통틀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겨난 달이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다 쉬에르홀름은 이렇게 말했다. “설사 앞으로 일자리 증가 속도가 10월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20년이 지나야 경기 침체 직전(2007년 12월)의 실업률(6퍼센트)을 회복할 것이다.”

유동성의 뿔

저 성장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차로 “양적 완화”(흔히 QE2로 불린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경기 침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몇몇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경제 붕괴 위험에 맞서 현대적 형태의 ‘돈 찍어내기’를 실시했다. 그들은 정부와 민간 채권을 대거 사들여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렸다.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내년 중반까지 추가로 6천억 달러를 더 투입하려 한다. QE2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고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다.

많은 기업과 가게는 2000년대 중반에 쌓인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많은 은행도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영국중앙은행도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QE2는 자동으로 지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의 이자율이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이것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케인스는 이런 상황을 “유동성의 뿔”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케인스가 개인적으로 선호한 불황 타개책인 국가가 민간 부문을 대신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

유럽에서는 긴축 정책이 일반적이고 미국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이상 오바마의 추가 경기 부양책 요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QE2는 미국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켜 미국 수출품을 더 싸게 만들고 그것이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QE2 발표를 예상하고 유로화와 엔화에 비교해 달러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 왔다.

그러나 유일하게 달러화 대비 가치 상승이 지지부진한 주요 통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 통화인 위안화다.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엄청난 수출 기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시켜 왔다.

QE2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추이텐카이와 독일 재무장관 울프강 샤우블프강 쇼이블레는 미국의 QE2를 비난했다. 남반구 대국들은 미국이 자기를 나라에 엄청난 투기 자금이 들어오도록 할 조치를 도입한 것에 분노했다.

그래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담은 아마도 살얼음판일 것이다.

전 세계가 ‘환율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브라질 재무장관 기도 만테가의 경고는 참으로 적절했던 것 같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약: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사진 이매진

“지금 반격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11월 6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7일 노동자대회는 높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등 잇따른 승리와 비정규직 투쟁의 분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전야제는 좌파 단체들이 주최했다. 민주노총이 공식 주최하지 않았음에도 전야제에 1천 명이 참가했다.

전야제의 백미는 6년간의 사투에서 승리한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의 발언이었다. 김소연 분회장이 “1천8백95일 만에 기륭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고 하자 우리와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가득 메운

11월 7일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 시청광장과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우고, G20 정상회의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동희오토지회 최진일 사무장의 발언은 큰 박수를 받았다.

“제가 투쟁할 때만 오로지 제 머리에 찍힌 ‘비정규직’이란 낙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를 얻어냈지만, 갈 길이 멀지만, 절망의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 그 속에서 동지들을 만나고 또 다른 전태일을 만날 것입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를 제안하며 “제 시민민중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이명박은 이제 꺾였다”고 말했다.

운수노조 박상천 조합원은 대규모 시위대열을 보며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었던 것도 사실 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예상 외로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무됐어요.”

충북의 현대제철에서 온 한 노동자는 프랑스 노동자 투쟁에 고무받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진중공업 김상욱 수석부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11월 11일 금속노조 파업 일정에 맞춰 전 조합원이 파업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희오토, 기륭의 승리 소식에 조합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싸워보자는 분위기죠.”

전주에서 올라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감을 얻어 현장에 내려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버스 노동자는 이날 집회를 이렇게 평했다.

“오늘 노동자대회부터 반격이죠. 지금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지금이 단결과 투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다.

박설·최미진

많은 언론들은 이날 집회를 보도하며 G20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수만 명의 모습을 소개했다.

그런데 〈민중의 소리〉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부각했다.

〈민중의 소리〉가 계급의 적인 손학규가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쉬움을 평한 것은 유감스럽다.

아마 노동계급 투쟁이 반MB 민주

연합으로 정치적으로 수렴되기를 원해서인 듯하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의 공범이었고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에도 일관되게 맞서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보여 준 투지를 발판으로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과 자본가 정당의 연합인 반MB 민주연합은 이런 투쟁 건설에 해를 끼칠 뿐이다.

금속노조의 KEC 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KEC 투쟁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 파업하겠다고 하자, 정부와 보수 언론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협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이번 파업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경 대처”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G20 서울회의에 먹칠하지 말라”고 으박질렀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 중에 파업과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기필코 막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의 심정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동안 노조의 경제투쟁을 ‘이기적 제 몫 챙기기’라고 비난해 온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위한 정치투쟁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역지일 뿐이다.

핍박받는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노동자·민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위협받는 ‘국익’은 소수 재벌·부자의 이익일 뿐이다.

혜방

“G20[을] 혜방 놓아 일자리 더 없앨 건가” 하는 〈동아일보〉의 거짓 선동도 역겨울 따름이다. 세계 지배자들은 노동유연화와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공조하고 있다. 이런 지배자들의 계획을 ‘혜방 놓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지배자들은 2007년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파업 때도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정치투쟁에 대한 저들의 비난은 매우 의식적이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작업장의 좁은 틀 안에 가둬서 자신들의 지배를 위협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넘어 전국·국제적 문제들에 관여하고 발

언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다. 이런 정치투쟁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며 자신감을 높여서 경제투쟁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금속노조는 지배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부가 치적으로 삼으려는 G20 정상회의 때 투쟁에 나서 정부와 KEC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금속노조 지도부가 민주당 등 야5당과 함께 노사 간 중재로 KEC 점거농성을 해제시킨 것은 이런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번 연대파업에 현대차·기아차 등 주요 부대가 동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의 의의는 작지 않다.

금속노조는 이번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성과를 발전시키며, 하반기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 대한 연대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박설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